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PTSD)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 방안*

김 묘 연**

김 형 빈***

국문요약

본 연구는 법무부 소속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그룹인터뷰(FGI)와 심층 면담을 통해 외상후스트레스(PTSD)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신건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PTSD)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제도적 관점에서는 예방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기 개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교정조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과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필요하며 교정조직 내에서는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상담·교육적 관점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욕구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마음나래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특화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주제어: 교정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전문가그룹인터뷰(FGI), 심층 면담, 정신건강 지원 방안

I. 서론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학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에도 불구하고 우울, 불안, 수면 장애, 외상후스트레스 등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7년 222만 775명, 2018년 241만 3,039명, 2019년 260만 2,252명, 2020년 271만 9,501명, 2021년 302만 1,149명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7년에 비해 2021년 약 80만명 급증하였다(중앙일보, 2022).

* 본 연구는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 제1저자

*** 교신저자

정신건강과 관련된 진료 원인 중 외상후스트레스(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는 생명 또는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현상으로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유사한 극심한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험을 포함하며 사고나 재난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처리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경험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외상후스트레스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5년 7천268명, 2019년 1만570명으로 최근 5년간 외상후스트레스 환자는 45.4%(연평균 9.9%) 증가하였다(헬스인 뉴스, 2020). 외상후스트레스는 직무 특성상 극한의 상황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위험성이 높은 직업군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 위험성이 높은 이와 같은 직업군의 정신건강 문제는 직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직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이창수, 이용주, 홍상욱, 2021).

2016년 법무부에서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검사를 통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24.3%가 불안, 우울, 외상 증후군 등 정신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교정공무원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1년 동안 사망한 62명의 교정공무원 중 원인이 자살인 경우는 24명(38.7%)으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8명의 교정공무원이 자살로 사망하였고 24.3%가 우울, 불안 등 외상 증후군으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18).

2016년, 2018년, 2020년 실시된 세 차례의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참여자 중 38.2%는 정신건강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법무부, 2022). 2017년 1억 8천3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18년 3억 200만원, 2019년 4억 7천900만원, 2020년 6억 6천만원, 2021년 8억 4천100만원, 2022년에는 8억 4천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서울신문, 2022). 이와 더불어 2022년 법무부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37.4%는 내가 속한 기관의 수용 질서에 대해 ‘조금 나쁨’, 21.5%는 ‘매우 나쁨’으로 응답하여 응답자의 58.9%가 수용 질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는 심각한 상태이며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지원이나 대책 마련도 부족한 실정이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는 이미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방안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에 반해, 교정공무원은 수용자들과 항상 접촉하며 수용자들의 자살과 자해, 폭력에 늘 노출되어 있으나, 언론이나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거의 어려운 폐쇄적인 직무 특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현재까지 간과되어왔다.

교정공무원이 상대하는 수용자는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자들로, 교정공

무원들은 수용관리 과정에서 수용자로부터 언어적 폭력(80%)과 신체적 폭력(20%)을 경험하고 있다(이수정, 윤옥경, 2004).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교정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거나 직무환경 및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이는 수용자에 대한 심리적 개입도 중요하지만 24시간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일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이용주, 박근영, 2018).

법무부는 2019년 전국의 교정공무원 중 24.3%(약 3,900명)가 수용자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와 각종 사고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수면 장애, 이상 성격 등의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수용자의 자살을 직접 목격했거나 폭행을 당한 교정공무원에 대해서만 심리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 2019). 교정공무원은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이용주, 2019). 교정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특수성과 범죄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용자의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와 교정교화를 목표로 하는 교정공무원의 업무와 교정행정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류종천, 2004). 직무 특성상 수용자와 직접 대면이 많은 교정공무원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 직업군에 비해 이직률이 높으며, 특수직업군에 속하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과 비교해도 이직률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외상후스트레스는 교정공무원의 이직과 행정 서비스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에 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는 필요하며, 교정공무원이 처해 있는 환경 및 직무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실질적이며 실현 가능한 정책적 제안과 정신건강 지원 방안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전문가그룹 인터뷰(FGI)와 심층 면담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외상후스트레스(PTSD)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정조직 및 교정공무원

교정조직은 교육 및 직업훈련, 교화 활동을 통해 출소한 후 사회에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수용자의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돕는 조직이다. 교정본부는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로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의 8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교정본부를 보좌하며 업무 집행의 지휘와 감독을 하는 중간 감독기관으로 4개의 교정청(서울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과 민영교도소를 포함하여 전국의 54개의 교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교정조직은 1948년 9월 13일 법무부 행정국을 시작으로 출범하여 2007년 11월 30

일 법무부 교정본부로 승격되었다.

교정공무원은 제복을 입고 생활하며 수용자의 구금확보, 분류심사, 심리치료,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 취업과 창업 알선 등 재사회화를 돕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정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근무 형태를 보면 수용자를 대하는 특수한 일을 담당하고 있어 특정직 군에 가까워 보이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공안직군 교정 직렬에 속한다. 교정공무원의 채용은 크게 공개경쟁 채용과 경력경쟁 채용으로 나눌 수 있다. 공개경쟁 채용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쟁 시험을 실시하여 선발하는 제도이며 주관은 인사혁신처에서 한다. 경력경쟁 채용은 학력, 경력, 자격증 등 일정한 채용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제도로 법무부에서 주관한다(2022, 교정통계연보). 특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교정공무원은 행정직군에 해당하여 별도의 계급이 없고 일반 공무원과 같이 1급~9급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2.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PTSD)

외상후스트레스(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이며 정신적 외상이다. 외상후스트레스는 외상을 경험한 후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으로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상후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외상 경험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시의 기억이 계속 떠오르며 그러한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장소나 활동을 회피하려 하고 피하게 된다. 그리고, 수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예민해지고 집중을 하지 못하며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다. 외상후스트레스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사고나 재난의 처리와 관련된 경험이 있거나 외상을 목격한 사람도 경험할 수 있다. 극심한 외상 사건은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꾸준히 일어나는 사건이나 경험에 의해서도 외상후스트레스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상후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 사망 또는 부상을 목격한 사람, 외상을 경험한 사람의 가족, 외상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유족,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직업군(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정공무원, 의사 등)이 경험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와 직접 대면하는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용자의 폭력과 폭행 등 외상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동료 직원의 경험을 목격하는 등 외상후스트레스의 발생 빈도가 높은 직업군이다.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자해나 자살사건 발생 시 처리 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할 수 있다. 외상후스트레스는 수용자로 인한 폭력, 폭행 피해 경험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만큼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이수정, 구현아, 홍영오, 2005).

우리나라는 수용자에 대한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부터 교정공무원의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수용자의 인권과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수용자에 대한 통제가 다소 어려워졌고 교정공무원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수용자 관리가 이전보다 어려워지면서 교정공무원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백철, 2016). 수용자의 인권을 감시, 감독하는 기구(국가인권위원회, 교정행정자문위원회, 법무부 인권국 등)가 설립되었으며 수용면적 확대, 화상

접견, 원격진료 등이 이루어졌다. 수용자는 자신의 처우에 의의가 있다면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청원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수용자의 청원이나 행정심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정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와 함께 폐쇄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며 스스로 '전문적 재소자' '또 다른 재소자' 등으로 부르고 있다(정혜경, 2014).

수용자로부터 고소, 고발당한 교정공무원은 2012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만 7천 336명이며 수용자로부터 폭행 사건은 2012년 43건에서 2021년 111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약 2.5배가량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수용자와 관련된 자살, 자해, 폭력, 폭언, 고소, 고발 등의 원인에 의한 외상후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임혁, 김혜숙, 이효영, 2013). 2018년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4시간 수용자를 직·간접적으로 대면하는 업무 특성상 다양한 수면 장애를 경험하며 근무시간 동안 항상 긴장하고 있으며 각종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2018, 세계일보).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자살, 자해 사건과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2018, 법무부).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교정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주요 원인

언어적 폭력	욕설이나 비어 모욕적 또는 위협적 표현
신체적 폭력	심각한 폭력(전치 2주 이상) 단순한 폭력(전치 2주 미만) 뺨맞기, 침 뱉기, 벽에 밀기, 오물 투척 (쓰레기, 용변 등)
정서적 폭력	신체적 위협으로 인한 불안감 및 긴장감 교정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자살사고, 자해 등) 출소한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외상 경험	자살, 자해, 폭력 등의 목격 및 처리 경험 협박과 부당한 요구 경험 고소, 고발, 진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

3. 정신건강 지원 현황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용자의 심리치료를 기획하고 성폭력, 아동학대 사범 치료, 약물중독 사범 재활, 자살 위험군 전문 상담, 심리치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16년 심리치료과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법무부 교정본부의 심리치료과는 교정조직의 업무 특성상 교정공무원을 위한 운영보다는 수용자 중심의 운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서울 남부교도소 심리치료센터를 시작으로 포항교도소, 밀양구치소, 청주교도소, 청주 여자교도소, 군산교도소, 목포교도소에 심리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의정부교도소, 안양교도소, 진주교도소, 천안교도소, 군산교도소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 설치된 12개의 심리치료센터 및 심리치료과도 교정본부의 심리치료과처럼 수용자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교정공무원은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 교정본부는 2017년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외부의 전문기관과 계약을 하고 '교정공무원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외부 전문 상담을 확대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도에는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직접 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심신케어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현황은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현황 (2017년 ~ 2021년)

연도	총계	직무스트레스 관리	찾아가는 심신 케어	외부 전문상담	트라우마 극복
2017	1,156	-	939	217	-
2018	1,603	270	1,073	260	-
2019	3,080	300	2,151	418	211
2020	589	코로나19 미운영	코로나19 미운영	478	111
2021	4,295	785	2,774	720	16

출처: 법무부 2022 교정통계연보

현재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는 그 위험성에 비해 지원 가능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2019, 김경태). 교정공무원의 직업 특성과 비슷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모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어 삶의 질 향상과 정신건강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6년 「교정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법안은 제정되지 않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와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 방법인 전문가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와 심층 면담을 활용한 연구 방법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전문가그룹인터뷰는 집단 내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끌어내어 특정한 주제에 대한 참여자의 깊이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들의 다양한 견해와 경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경험, 의미, 이해를 도출하여 연구주제에 다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Vaughn et al., 1996; Morgan, 1998). 전문가그룹인터뷰는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공유하기 때문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특정한 주제에 대해 그룹 참여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한꺼번에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그룹인터뷰와 함께 실시한 심층 면담은 전문가그룹인터뷰에서 다루기 어려운 개인적인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전문가그룹인터뷰와 심층 면담은 연구참여자가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다른 연구참여자와 공유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질문 할 수도 있어 면담하는 과정에서 풍성하고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설문 조사와 같은 양적 조사 방법에서 도출하기 어려운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유용하다.

2. 연구참여자

깊이 있는 정보 수집과 전문적이고 충분한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이에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현재 법무부 산하 교정기관에 근무하고 수용자와 직접 접촉이 가능한 ‘보안과’ 근무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 당사자인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한 심리치료팀 근무자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전문성을 유지하였다.

셋째, 정책이나 제도개선 등 정신건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교정기관 근무경력이 최소 7년 이상으로 사회복지·교육 및 심리치료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 한계를 두었다. 전문가집단의 그룹 선정 기준은 교정기관의 특성을 바탕으로 구치소 근무자와 교도소 근무자로 나누어 2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직급 및 경력, 자격증 등의 특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연구참여자의 특성

그룹	연구참여자	특성
A	□ 팀장. 교감. 6급. 경력 31년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중독심리사. 생애위기상담사 등
	□ 상담. 교감. 6급. 경력 31년	심리상담 박사수료. 범죄심리사. 사회복지사. 인권강사 등
B	□ 팀장. 교감. 6급. 경력 33년	심리상담 석사졸업. 중독심리전문가. 범죄심리전문가. 인권강사
	□ 상담. 교위. 7급. 경력 16년	상담심리 전공. 생애위기상담사.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사
	□ 교육. 교위. 7급. 경력 12년	미술치료 전공
	□ 상담. 교사. 8급. 경력 07년	상담심리 석사졸업.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등
	□ 상담. 교사. 8급. 경력 07년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사

3. 연구 절차

연구는 2022년 10월 4일~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전문가그룹인터뷰를 통해 기초적인 자료 분석 후 보충할 질문과 내용을 보완하여 심층 면담을 하였다. 연구 절차는 총 4단계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 1단계에서는 문헌조사 및 검토를 통해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외상후스트레스 실태 및 정책 현황을 확인하였다. 2단계에서는 전문가그룹인터뷰를 하였다. 업무 특성이 다른 구치소 근무자와 교도소 근무자로 나누어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의 정확한 기록을 위하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음성을 녹음하였다. 3단계에서는 녹음된 내용을 전사한 후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여 반구조화 질문지를 활용하여 연구자의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은 30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로 추가 질문이 필요한 2명을 선정하였다. 추가 질문은 전문가그룹인터뷰에서 도출된 내용을 상세히 질문하였고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태로 반구조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4단계에서는 전사한 전문가그룹인터뷰 내용과 심층 면담 내용을 분석, 정리하였다. 연구 절차는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연구 절차

(1단계) 문헌조사 및 검토	(2단계) 전문가그룹인터뷰	(3단계) 심층 면담	(4단계)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조사 • 실태 및 정책 현황 • 문제점과 시사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참여자 선정 • 심리치료전문가 7명 • 2그룹(구치소, 교도소) • 조사기간-2회 (2022년 10월 14일, 17일) • 반구조화 질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참여자 선정 • 30년 이상 근무자 2명 • 조사기간 -2022년 10월 19일 • 반구조화 질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및 문제점 • 지원 및 정책 방향

4. 자료수집 및 분석

전문가그룹인터뷰는 2회 실시되었으며 연구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 심층 면담을 하였다. 심층 면담은 전문가그룹인터뷰 이후 개인의 경험을 충분히 듣기 위해 연구참여자 중 2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은 전문가그룹인터뷰에서 도출된 내용 중 좀 더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질문이 필요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추가 질문을 미리 구성하여 면담에 활용하였다. 심층 면담에서 활용한 반구조화 질문지는 연구자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한 후 참여 동의를 작성하고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풍부한 자료수집을 위해 면담은 유연성 있게 진행되었으며 반구조화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Krueger(1998)의 전문가그룹인터뷰 분석 4단계 과정을 바탕으로 개방코딩(Open Coding)형태로 범주화하였다. 전문가그룹인터뷰에서 활용한 반구조화 면담지는 2009년 Krueger와 Casey의 시작, 도입, 전환, 핵심, 마무리에 근거하여 5단계로 진행하였다. 전문가그룹인터

뷰 면담지는 다음 <표 5>과 같다.

<표 5> 전문가그룹인터뷰 면담지

단계	질문내용
시작	- 간단히 자신을 소개하여 주세요. (하는 일, 경력, 관련 경험, 외상 후 경험 여부)
도입	-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 안내
전환	-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핵심	-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은? - 외상후스트레스 발생 원인은? - 외상후스트레스 중요성 및 심각성은 어떠한가요? - 외상후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법무부 지원정책 방안은? - 지원정책 방안의 문제점은? - 나는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경험이 있나요? - 경험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 어떻게 극복했나요? - 동료나 상사의 외상후스트레스 경험을 듣거나 본 적이 있나요? - 외상후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 방안은? -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책은?
마무리	- 토론한 내용의 요약 및 설명 - 기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5. 타당도 및 신뢰도

질적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진실성, 신뢰성, 중립성, 적용성을 기준(Guba & Lincoln, 1985)으로 본 연구를 살펴보았다. 진실성은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며 연구참여자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나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노력하였다. 면담 내용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행동이나 표정 등 비언어적인 표현도 기록하였다.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분석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인 전문가그룹인터뷰와 심층 면담 경험이 있는 박사학위 전문가 1명과 박사수료 동료 전문가 1명에게 자문과 자료검토를 받았다. 연구자는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자료 분석과 해석과정에서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연구의 정확성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에게 결과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교정 공무원 2명이 분석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교정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 검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참여자 선정과 참여 의사, 자료수집 등의 과정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연구참여자 윤리를 확보할 수 있다(신경림 외,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연구참여자에

계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먼저 서면으로 알리고 면담 시에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를 중단,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와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설명서와 동의서를 제공하였으며 수집한 개인정보와 녹음파일, 전사본 등은 연구의 종료 후 폐기됨을 안내하였다. 셋째, 면담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연구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연구자에게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연구자는 이 과정을 통해 연구의 윤리와 연구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IV.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전문가그룹인터뷰와 심층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종 상위 3개의 구성요소와 18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도출하여 범주화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외상후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 방안

상위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1.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	1) 예방적 관점
	2) 법·제도적 장치 마련
	3) 정신건강 관련 전문센터 건립
	4)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진
	5) 위기 개입 시스템 구축
	6) 외부 법률 자문
	7) 동료 간의 소통과 휴식 공간 마련
	8) 정신건강 필수 교육으로 채택
	9) 시설의 현대화
2. 사회·문화적 지원 방안	1) 조직 내 건강한 문화 조성
	2) 교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
3. 상담·교육에 관한 지원 방안	1) 프로그램 적극적 홍보
	2)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상담사 역량 강화
	3)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노력
	4) 수요자 욕구 조사를 통한 내실화
	5) 다양한 외부기관 선택 기회
	6)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택의 폭 향상

1.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

1) 예방적 관점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는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성이나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예방적 접근 방안이 요구된다.

“마음나래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상담도 하고 숲 체험 활동도 진행하지만 관심은 적은 편이다. 홍보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이루어지는 상담이나 교육이 있어야 한다.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 스스로 자가 진단도 하고 위험성이 있다 싶으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외상후스트레스는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 외상후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알코올에 의존한다. 요즘 MZ세대는 취미를 가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보았다. 술보다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 같다.”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것보다는 동호회 활동이나 예방적인 부분에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함이 필요하다.”

2) 법·제도적 장치 마련

연구참여자 7명 모두 교정본부의 법·제도적 뒷받침을 최우선 과제로 보았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경우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정공무원도 외상후스트레스와 관련된 검사 및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정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고통을 이겨내는 시간은 다르다. 사건이 발생하거나 외상 증후가 있다면 자신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장기 휴가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은 휴가를 쓰거나 상담을 받기도 힘들다. 나 때문에 다른 직원의 업무가 늘어나고 주위 시선도 신경 쓰이고 나 스스로도 참고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어 행동으로 실천하기 어렵다. 본부에서 강제 규정으로 휴가를 준다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음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친구가 소방공무원인데 거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복지가 좋다고 하였다. 우리도 법 규정이 이루어지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으로 규정되어야 다른 직원들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휴직도 하고 휴가도 내고 할 수 있다.”

“사건, 사고 발생 시 즉각적 개입이 필요하다.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드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아마 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정신건강 관련 전문센터 건립

현재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는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각 지역단위의 심리치료팀이 있지만 주로 수용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정공무원의 이용 편리성을 감안하여 4개 지방교정청 단위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에서 직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1개로는 부족하다. 직원들의 이용이 편하도록 지방교정청 단위의 정신건강 전문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현재의 각 지역의 심리치료팀은 수용자의 심리치료를 위한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직원까지 치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직원을 관리하는 별도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심리상담은 가까운 곳에서 주기적으로 받아야 효과가 있고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러기 위해 교정본부의 심리치료과에서 모든 일을 맡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보다 가깝고 근접성이 좋은 지방교정청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 각 지방교정청에서 관리한다면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4)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진

전체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주기와 동일하게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발전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원하면 심리검사를 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잘 하지 않는다. 이런 검사들을 기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함이 좋을 것 같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 고위험군도 잡아내고 조기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건강검진과 함께 정신건강 검진을 받는다면 외상후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검진과 동일한 주기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리검사 등의 사전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분명 지금보다는 나은 정신건강 관리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5) 위기 개입 시스템 구축

외상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위기 개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조사 단계에서

2차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과도한 책임 소지를 묻지 않고 수용자의 사고나 폭력 등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근무 배치를 변경하고 의무적으로 휴가와 위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리하던 수용자의 사고로 사건 처리 절차 과정에서 스트레스 발생이 매우 높았다. 조사 과정에서 책임 소지를 묻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규정대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초기 내 마음을 다독일 시간이 없었다. 나의 마음보다 책임과 과실 여부 때문에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매우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조사도 중요하지만 담당자의 마음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사고 장면이 이후 계속 떠올라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건 발생 초기 위기 개입 체계가 탄탄했다면 아마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다. 담당자의 책임 소지를 묻기에 앞서 우리들을 위한 시스템이 탄탄해져야 할 것이다.”

“수용자의 자해나 자살사고 발생 시 그 뒤처리도 우리의 몫이다. 사고를 경험한 것도 심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다. 교도관도 수용자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정해 주고 그에 합당한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란다. 예를 들면, 수용자 자살사고를 목격한 직원에 대해 휴가 또는 배치 변경을 반드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조직의 분위기나 여건으로 휴가나 배치 변경은 사실 어렵다. 법적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위기 개입 시스템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6) 외부 법률 자문

수용자에게 고소, 고발을 당했을 경우 충분한 법률적 지원이 가능한 외부 법률전문가 매칭이 요구된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보다는 수용자와 관련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더 많다. 잘 맞지 않는 수용자가 들어오면 출근하는 것이 정말 싫다. 수용자와 마찰이라도 생겨 고소를 당하면 그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게 힘들다. 수용자의 고소, 고발은 교정본부에서 담당이 있어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좀 더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다. 오히려 법률지원금을 지원해주는 형태도 좋다.”

“수용자의 고소로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는 교정본부에서 법률적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지원에 불과하다. 실질적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심하고 실질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 법률전문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각자의 고소, 고발 조건에 적합한 변호사나 법무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보다 전문적인 처리를 원한다.”

7) 동료 간의 소통과 휴식 공간 마련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체육시설, 동호회 모임 등의 복지시설 확충으로 외상후스트레스를 본

인 스스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새로 지은 몇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관들은 노후가 많이 되어 있고 수용자도 과밀한 실정이다. 그러니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설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우리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외상후스트레스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업무 특성상 오래 근무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에 스며들어 우울하거나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나서 외상후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 같다. 멘탈이 약해지면 더욱 심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 특히, 여러 번의 위기 상황을 경험한 교도관은 더욱 심하고 우리가 봐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그냥 참고 견디거나 그만두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런 업무적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신뢰감이 쌓여 어려움도 서로 이야기하며 고통스러운 부분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폐쇄된 공간에서 수용자들과 매일 생활하다 보니 우울감과 피로감이 항상 누적되어 있고 폐쇄적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사회적 활동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야간 근무도 있기 때문에 수면 장애도 많이 발생한다. 수용자와의 마찰은 늘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는 교도관이라면 누구나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잘 해소하고 지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살, 자해, 분노 장애 등 여러 수용자를 경험하였으며 그냥 술 한잔하고 잊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고 지냈다. 주위에는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해 휴직하는 동료도 본 적이 있다. 내가 당한 것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많은 생각과 걱정이 있었고 나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고 힘들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동료와 서로 이야기도 좀 나누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된다. 아마 다른 직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나만 그런 줄 알고 전전긍긍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싶다.”

8) 정신건강 필수 교육으로 채택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전 직원 대상의 필수 교육으로 채택하여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 상담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무연수가 늘어 갈수록 어떤 직원들은 같은 직원이 보기에 이상한 성격으로 바뀌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서로 어려움에 대해 전혀 이야기 하지 못한다.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소문이 나면 함께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의무적이더라도 교육이나 관리가 있어 주어야 그나마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의무교육보다 외상후스트레스나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이 필수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많은 교육 중에는 유용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교육에 불과한 것들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을 듣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교육에 그치는 보여주기 식 교육이 아닌 트라우마와 관련된 외상후스트레스 교육을 받는다면 유용하리라 본다.”

9) 시설의 현대화

교정시설의 현대화와 근무 인원의 증원으로 교정공무원의 과중한 업무가 줄어들면 교정사고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도 감소한다.

“수용되는 인원 에 비해 교정시설은 부족하다. 거기에 교정공무원은 일도 많고 근무 여건도 좋지 않다. 공무원이지만 여건은 열악하다. 새로 지은 교도소나 구치소도 있지만 대부분 아주 오래된 시설로 노후 되어 있다. 근무환경이 좋으면 아무래도 외상후스트레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현재 오래된 교정시설이 많지만 증축하거나 이전하기 어렵다. 구치소, 교도소는 일반인들에게 혐오시설로 각인되어 이전하기 쉽지 않다. 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우며 이전할 곳의 주민들 반대로 이전 장소가 있음에도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의 현대화가 절실하며 이는 교정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2. 사회·문화적 지원 방안

1) 조직 내 건강한 문화 조성

조직 내 이상 증후가 발생하면 동료나 상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서 내 책임자의 역할과 주의 관찰이 중요하며 ‘외상후스트레스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는 조직 내 건강한 문화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수용자가 선풍기 날을 부셔서 자신의 몸을 긋고 머리를 벽에 박아 피를 흘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고 오랜 시간 그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적이 있다. 그 이후 얼마동안 사고가 또 날까 걱정되고 두려웠다. 이런 어려움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조직 내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할까봐 힘들어도 서로 말하지 않는다. 좀 편안하게 힘든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어떨까 싶다.”

“근무하다 보면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난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외상후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 같다. 담당하던 수용자가 자살을 하거나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동료들 중 우리가 봐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상담을 권유하지 못한다. 스스로 그냥 참고 견디거나 술로 해결하다가 끝내 그만두는 직원을 보았다. 그때가 가장 안타깝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스스로 원하지도 않는데 괜히 보고하거나 권유해서 조직 내에서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인사 이동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용자를 대하는 일이다 보니 참고 견디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약해 보이면 일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한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배치를 옮겨 줘야 필요하다.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계속 근무해야 함은 너무 가혹하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배치를 옮겨 줌으로써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이러한 사안들은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지금도 가능은 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요구하지도 권유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 간의 소통이다. 서로 간에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어려움도 서로 이야기하고 고통스러운 부분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외상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사례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교정사고가 발생하여 힘들면 심리치료과 직원과 상담도 가능하고 외부기관을 통해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으며 근무 배치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직원은 많지 않다. 본인 스스로가 수용자를 상대하는 일을 하는 교도관은 강해 보여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다.”

2) 교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정에 대한 폐쇄적·부정적 이미지의 영향으로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과 정책 소외현상이 있다.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와 캠페인, 공익 광고 등으로 교정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교정행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영화에서 교도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다. 그런 이미지가 고정관념이 되어 영향을 준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고정관념에 많이 위축이 되어 있다. 물론 요즘은 공무원에 대한 전체적 이미지가 좋아져서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다. 다양한 통로로 우리의 이미지 변신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영화에서의 긍정적 이미지 개선이 요구된다.”

“공익 광고를 통해 교정공무원에 대한 청렴결백을 홍보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 관심도 받고 이런 광고를 꾸준히 진행한다면 교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리라 본다.”

3)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상담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받는 다.’ 는 상담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는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상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런 것을 신청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될까 걱정되고 아직도 상담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받는다는 인식이 많은 것 같다. 상담에 대해 좋은 인식, 올바른 인식을 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상담에 대한 인식개선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상담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의형식 또는 집단활동 방식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편안하게 상담에 접근할 수 있는 활동 위주의 방법을 통해 상담을 쉽게 접근해야 한다. 그 이후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 상담·교육에 관한 지원 방안

1) 프로그램 적극적 홍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외부 위탁기관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사업으로 ‘마음나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유익성에 비해 이용자가 적고 홍보가 부족하다.

“마음나래프로그램의 위탁기관이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직원들이 잘 알지 못하고 별로 관심이 없다. 기존과는 다른 획기적인 홍보나 마케팅이 있어야 직원들이 관심을 보일 것 같다. 자녀들이나 가족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 잘 모른다. 상담료도 무료이고 혜택도 많은데 실제 이용자들은 별로 없다.”

“마음나래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홍보가 되지 않았는지 이용이 많지는 않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해도 이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 자녀의 진로나 적성 검사, 심리검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

2)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상담사 역량 강화

법무부 교정본부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와 상담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마음나래프로그램은 교정공무원과 가족을 위한 무료상담프로그램으로 교정공무원이 상담을 의뢰하면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외부기관에서 각 지역의 사설 상담센터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상담자의 전문성과 역량에 차이가 있다.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상담사의 역량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

“상담에서 상담사의 인간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은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사의 관리가 필요하며 전문적 교육이 필수적이다.”

3)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노력

외상후스트레스는 전문적인 상담 및 관리가 필요하다. 교정공무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외상후스트레스 프로그램 개발과 매뉴얼이 필요하다.

“심리치료팀에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진다. 알코올, 마약, 성폭력 사범의 교육 내용이 다르듯 발생 빈도가 높은 외상후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전문가에 의해 프로그램이 특화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서라도 개발되어야 한다.”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는 다른 직군의 외상후스트레스와는 다른 고유의 특성이 있다. 그 특성을 기준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연구자와 외상후스트레스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이 구성이 되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수요자 욕구 조사를 통한 내실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및 교육에 대한 욕구 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수용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외상 경험은 없지만 주위 사건들을 보고 들으며 늘 불안감과 긴장감 속에 생활해 나도 모르는 사이 점점 PTSD에 노출되고 있다. 우리들이 주인공이니까 우리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것을 반영해 주었으면 한다.”

“교정공무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교정공무원의 욕구 조사가 필수적이다. 조사 연구를 위해서 설문 조사도 좋을 것이다.”

5) 다양한 외부기관 선택 기회

교정공무원은 ‘마음나래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정공무원의 무료 상담은 마음나래프로그램 위탁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사설 상담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이용자의 편리성과 선택권을 존중하여 어디서든 상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음나래프로그램을 받고 싶어도 접근성이 어렵다. 이 프로그램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도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담센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집 근처에 없는 경우도 많다. 상담받는 우리가 집에서 가까운 센터를 정해서 갈 수 있으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처럼 외부 위탁기관과 협약된 사설 상담센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선택한 사설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지원금을 청구하는 시스템도 고려해 볼 만하다. 각자의 욕구에 맞게 사설 상담센터를 선택하도록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자!”

6)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택의 폭 향상

여행, 체험, 힐링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교정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용자와 함께 늘 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항상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근무를 한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PTSD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직무에 지친 우리를 위한 예방 차원의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유와 휴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외상을 경험했다고 모두 힘든 것은 아니니까 각자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막상 상담이나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별로 마땅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는 ‘보안과’ 근무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으로, 현재 교정기관의 심리치료팀 소속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그룹인터뷰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PTSD)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으로는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는 예방이 더 중요하며 교정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을 촉구함이 필요하다. 4개 지방교정청 단위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센터 건립이 촉구되어야 하고 전체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 또한, 외상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위기 개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수용자에게 고소·고발을 당했을 경우 외부 법률전문가를 매칭시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정공무원을 위한 복지시설, 동호회 활동 등을 지원하여 직원들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의 현대화와 교정공무원의 인원 증원으로 수용자에 대한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수용자 관리가 용이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문화적 지원 방안으로는 이상 증후가 발생했을 경우 조직 내 구성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은 외상후스트레스를 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전원은 이상 증후 발생 시, 책임자나 동료에게 이야기하고 도움받는 건강한 문화 조성이 가장 필요한 지원 방안이라고 언급한다. 하지만, 교정조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조직 내 문화 개선이다. 이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

내 책임자의 역할과 주의 관찰이 중요하며 '외상후스트레스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정행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적극적 홍보와 캠페인, 공익 광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필수 교육을 제안한다. 또한,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는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담·교육에 관한 지원 방안으로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사업 '마음나래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프로그램의 전문화가 요구되며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특성에 맞는 외상후스트레스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상태이며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교정공무원의 욕구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내실화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교정공무원의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설 상담센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다양성과 자율성, 편리성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인터뷰와 심층 면담이라는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 관련 연구들과는 차별성이 매우 크다. 교정공무원 대상의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고 특히,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자료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기까지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어려웠다는 아쉬움과 연구참여자가 지방소재의 교정기관이라는 점에서 표본의 수를 전국적으로 다양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의 결론은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원 방안은 교정공무원의 경험에서 나온 의견 및 결론이므로 교정행정 현장에서 정책에 반영되어 실무에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광훈·박종익·이수정·장광호. (2017). 교정시설 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 「신경정신의학」, 56(1), 20-27.
- 김경태. (2019).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관리에 관한 연구, 「경찰학 논총」, 12(3), 61-80.
- 김척수·김형빈. (2019). 공무원의 비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4(1): 5-27.
- 김형빈. (2019). 도시공간구조 재편에 따른 지역경제 균열의 가능성, 「산업경제연구」, 32(1): 405-427.
- 김형빈·김상현. (2017). ICT를 활용한 고령자 주거안전정책 방안 연구, 「한국지역정보학회지」, 20(1): 127-151.
- 김혜정. (2019). 부산지역 한부모가족 현황 및 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9」, 1: 309-343.
- 문유석. (2011).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수준과 직무 환경적 유발요인,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

- 연구», 15, 1: 119-141.
- 윤미. (2021). 중장년층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과 현상학적 탐색,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미·김형빈. (2022). 중장년층 재취업 활성화 정책방안: FGI기반의 AHP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6(1): 297-320.
- 이도선. (2018). 경찰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PTSD)관리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1(4), 134-159.
- 이민식. (2006). 교정공무원 폭력피해가 직무만족 및 전직 희망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17(3), 99-138.
- 이백철. (2016). 「교정학」, 교육과학사.
- 이수정·구현아·홍영오. (2005).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의 원인기제로서 수용자로 인한 폭력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산업 및 조직」, 18(2), 317-335.
- 이승욱. (2021). 수용자의 심리적 특성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구조적 관계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신영. (2011). 수형자의 정신건강 문제와 정신건강 서비스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51, 121-144.
- 이용주. (2019).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분석 및 예방과 관리방안, 「교정상담학연구」, 4(1), 81-107.
- 이창수·이용주·홍상욱. (2021). 교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및 건강복지제도 비교, 「교정상담학연구」, 6(3), 5-20.
- 임혁·이효영·김혜숙. (2013).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예방. 보건의료산업학회지, 7(3), 1-13.
- 윤옥경. (2006).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유발요인과 해소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5(4), 81-107.
- 정진수. (2003).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3(1), 13-174.
- 이지영·임재호·서수연. (2017). 경찰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3), 149-177.
- Morgan, D. L., & Krueger, R. A. (1998). The focus group guidebook. Sage.
- Vaughn, S., Schumm, J. S., & Sinagub, J. M. (1996). Focus group interviews in education and psychology. Sage.

<기타>

- 교정본부(2022). 2022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 교정본부. <http://www.corrections.go.kr>
- 법무부. <http://www.moj.go.kr>
- 법무부 보도자료, 2018년 08월 20일.
-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서울신문 보도자료, 2022년 08월 28일.

서울신문 보도자료, 2022년 08월 29일.

서울신문 보도자료, 2022년 09월 05일.

중앙일보 보도자료, 2022년 10월 25일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cdc.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통계청. <https://kostat.go.kr>

헬스인뉴스. <http://www.healthinnews.co.kr>

김묘연(金妙蓮):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의료상담심리학 박사수료를 하였다. 현재는 (주)한국회복연구소와 이룸심리상담교육센터 대표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심리상담, 교정상담, 부모교육, 사회적기업, 사회복지, 행정학 등이다.(simrikim@naver.com)

김형빈(金亨彬):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의료상담심리학과 책임교수를 맡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의회, 재무행정, 도시정책, 의료상담심리학 등이다. 주요 논문은 다산 정약용의 심리학적 분석을 통한 행정개혁사상(2021), 다산 정약용의 협치행정사상(2021), 중장년층의 재취업 의지에 관한 경로분석(2021)등이다.(hbkim@dau.ac.kr)

〈논문접수일: 2023. 1. 28 / 심사개시일: 2023. 1. 31 / 심사완료일: 2023. 2. 7〉

Abstract

Mental Health Support Measures to Relieve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of Correctional Officials

Kim Myo-yeon

Kim Hyung-b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effective and desirable mental health support ways to relieve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of correctional official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FGI) and in-depth interviews with correctional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mental health support plan to reliev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of correctional officers is as follows.

First, preventive support is needed at the policy and institutional level. Basic welfare laws related to their mental health should be enacted, and a prompt crisis interven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event of an accident.

Second, from a sociocultural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raise a positive awareness of counseling and social awareness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above all, it is very urgent to create a healthy culture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Lastly, from the perspective of counseling and education, the diversity and expertise of the 'Maumnarae Program'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program should be revitalized by identifying their needs.

Key Words: correctional officials,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Focus Group Interview(FGI), in-depth interview, mental health support measures